

NGO SERIES #18



반FTA인가 반미인가

김광동

 자유기업원

발 간 사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NGO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익숙한 것이 되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만큼 날로 커지고 있다. NGO의 숫자도 급속하게 늘어나서 정부에 등록된 숫자만 해도 3,800여개가 넘고 있다. 언론에서는 NGO 섹션을 따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학계에서도 ‘비영리학회’, ‘NGO학회’ 등 NGO 관련 연구그룹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한국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NGO가 급성장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NGO의 급성장은 한국사회의 강한 활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에너지가 NGO의 양적 팽창에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NGO의 질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학계의 노력이다. 최근 들어 NGO 관련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NGO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NGO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선언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NGO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의 현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찬반 양론이 경쟁하는 가운데 정교한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기업원에서는 한국의 NGO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NGO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양적으로 급팽창한 NGO의 활동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한편 살려나가야 할 장점들을 옹호함으로써 NGO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가 NG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언론인, 일반인들에게 토론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6월

자유기업원장 민병균

훑어보기

힘겨운 협상 끝에 한국과 미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었다. 수출주도적 경제발전을 지향해왔고 연 7,000억 달러의 무역량으로 세계적 무역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이 13조 달러가 넘는 세계 제1의 경제규모를 갖는 미국과 관세없는 자유무역시장을 만들기로 한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한층 더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며 또 한 단계의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의 의회 비준(批准)을 앞두고 중대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미국에서 일부 시장보호론자들과 노동단체들이 자국 시장과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지속적이고도 폭력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민중연대 등 기존의 좌파단체와 민노총, 민노당, 전농을 포함하는 노동·농민단체가 결집한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펼치는 불법적이고도 극렬한 반FTA 투쟁은 국회 비준 자체를 저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국민 대다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범국본으로 대변되는 반FTA운동단체는 이미 한-미FTA 체결 이전부터 반미운동을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해온 단체들이었다. 범국본 소속단체들은 그동안 발표된 성명서나 조직활동, 시위구호, 교육내용 등을 통해 FTA와 상관없이 미국을 제국주의국가이자 한반도 지배세력이고 평화저해세력으로 규정짓고 반미활동에 주력해 왔었다. 범국본 소속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했으며,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였으며, 미군 범죄나 환경문제를 지속적이고도 악의적으로 거론하며 한국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키는데 몰두해온 단체들이다. 나아가 범국본 단체들의 인식과 주장은 한국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한국사회에서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혁명전략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범국본 소속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해왔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왔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나 인권유린 등에 있어서 오히려 김정일 전체주의체제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합리화해왔다. 그렇기에 범국본의 FTA반대는 FTA에 대한 정책적 반대라기보다는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한-미FTA 반대운동일 뿐이다. 그것은 또 그동안 진행되어온 칠레, 일본,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과 달리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만 불법적 폭력행위를 무차별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그들의 사회인식과 투쟁노선 등이 전체주의국가이자 수령독재체제인 북한의 대미인식이나 대미투쟁노선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범국본의 한-미FTA 반대운동은 정상국가이자 동맹국가인 미국과 투쟁할 것을 선동하고 다른 한편으론 비정상적 전체주의체제이자 폐쇄적 실패국가인 북한을 두둔하며 실패한 체제가 가는 길을 함께 갈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있다.

범국본의 반FTA가 국가정책에 대한 견해차나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적 반대가 아니라 반미적 좌파단체의 전형적 반미운동일 뿐이며, 그것도 전체주의적 김정일체제의 반미전략과 동일한 맥락에서 펼쳐지는 반미운동으로 결과적으로 반미를 선동하며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적 질서와 자유시장 질서의 교란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은 전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목차

발간사	2
훑어보기	3
I. 들어가는 말	7
II. FTA의 의의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9
1. 자유무역과 한국경제의 발전	9
2. 한-미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III. 한국 사회에서 반미세력의 본질과 의미	16
1. 반미세력의 형성과 확산	16
2. 햇볕정책과 반미정서의 대중적 공고화	20
3. 반미운동의 목적과 활동방식	21
IV. 범국본과 한-미FTA 반대운동의 실체	25
1. 범국본의 구성과 주요 활동	25
2. 범국본의 핵심담체와 성격	27
3. 범국본의 반미적 반FTA운동	32
4. 반FTA단체의 친북적 인식과 태도	41
V. 반FTA운동과 반미운동의 비교	44
1. 한-미FTA와 다른 FTA 반대운동의 차이	44
2. 범국본과 북한의 반미노선 비교	46
VI. 맺는말	51

I. 들어가는 말

한국은 오랜 세월동안 전체주의 체제에 둘러싸여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극도의 고립을 겪으면서도 세계사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1년 소련 공산주의체제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제외한다면 한국에게는 주변 국가들과의 자유스런 무역이란 있을 수 없었다. 한국은 유럽의 네덜란드나 이탈리아처럼 혹은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우호 협력 속에 자유 무역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과 영토를 직접 맞대고 있는 유일한 체제인 북한은 전체주의적 공산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소련, 북한 등 전체주의국가들로 둘러싸인 고립에서도 수출주도적이며 개방지향적 경제체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이 개발도상국이던 한국 경제의 비약을 낳았고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2007년 타결된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에게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3조 2,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로 세계경제의 27%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관세없는 공동시장을 만든 것은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경제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에게는 또 한 단계의 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 가입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개방정책에 적극 나섰고, 자유무역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EU 등과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제1의 시장규모를 가진 미국과 자유무역체제에 돌입하게 된 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이전의 FTA와도 다른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 간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중대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의회 비준(批准)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일부 시장보호론자들과 노동운동 단체들이 자국 시장과 고용 보호를 목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에서는 반미세력들이 시장보호론자와 함께 한-미FTA 폐기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민노총, 민노당을 포함하는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의 불법적이고도 극렬한 반FTA 투쟁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대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국가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미FTA 반대운동은 시위의 과격성으로 보나 반대의 논리로 보나 정책 반대라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FTA에 대한 정책적 반대인지, 아니면 반미운동적 차원의 반FTA인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이익에 대한 견해차이나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산 전체주의세력인 김정일체제의 반미

전략과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펼쳐지는 반미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반FTA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만약 우리사회에서 펼쳐지는 반FTA운동이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유지와 강화라는 전략적 필요에 따른 것이고 한국의 사회질서나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교란과 와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고찰은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한-미FTA 반대운동이 정책적 비판의 차원에 따라 펼쳐진다고보다는 전형적인 반미운동의 일환으로 반FTA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과 이 같은 반미적 반FTA운동조차 자유민주적 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체제의 이념과 논리에 동조하는 차원의 반미활동의 일환은 아닌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FTA의 의의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자유무역과 한국경제의 발전

1948년 건국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정도로 극빈한 국가였던 대한민국은 50여 년 만에 경제규모와 교역규모에서 세계 제11위 전후의 위치에 와 있다. 이처럼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경제의 성장은 곧 자유무역 확대의 결과였다. 가발, 합판, 중석으로 시작하여 80년대에는 전자제품, 철강, 90년 이후엔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을 주요수출 품으로 했던 한국은 2006년에는 무역규모가 6,000억 달러에 도달하게 되었다. 빈약한 부존 자원과 좁은 국토를 가진 대한민국이 이처럼 세계사적인 성공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경제를 지향하며 개방을 통한 교역확대에 적극 나서며 산업경쟁력을 키워온 결과였다.¹⁾

불과 100여년 전만해도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9억 명에 불과했었던 자유시장경제 편입인구는 1990년초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로 이제는 전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자유시장경제 하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간과 방법의 문제에서 부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자유무역체제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책 선택에서 종종 다른 의견을 내는 경제학자들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데서 만큼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야말로 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당사국 모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²⁾

1980년대 몇몇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규제 정도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인 <표-1>을 보면 무역 규제가 적은 국가들 즉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에 대한 규제가 적은 국가들은 낮은 관세 덕분에 경제에서 수출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도 평균 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가 심한 국가들은 수출입 비중이 작고, 같은 기간 국민소득 성장률 역시 0%에 머물고 있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1) 좌승희, “고도성장과 산업사회로의 도약”, 김광동 외, 『한국현대사 이해』(경덕출판사, 2007), pp.238~275

2) 맨큐 편저·김경환·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교보문고, 2001), pp.63~218

<표 1> 무역규제 정도와 경제성장

	평균관세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1980~1990
	1980	1989	
규제가 적은 국가			
싱가포르	0.5	0.2	4.2
홍콩	0.0	0.0	5.7
말레이시아	7.7	3.2	2.6
아일랜드	3.0	2.5	2.9
타이완	3.6	2.2	6.5
타이	6.9	5.2	5.8
대한민국	4.1	3.0	8.6
인도네시아	2.9	2.2	3.7
평 균			5.0

	평균관세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1980~1990
	1980	1989	
규제가 심한 국가			
이란	8.5	14.6	-1.2
브라질	10.0	5.5	0.5
인도	15.5	21.6	3.2
페루	10.6	2.0	-2.6
방글라데시	13.4	12.1	2.0
르완다	13.3	n.a.	-2.3
아르헨티나	9.5	7.0	-1.7
시에라리온	13.3	11.8	-0.9
파키스탄	15.3	16.1	3.2
가나	17.3	11.4	-0.4
평 균			0.0

자료: 마이클 워커 편저·김정호 편역,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자유기업원, 2004), p.110

실제 자유무역을 위한 국가간 협상은 꾸준히 늘고 있고 다자간 무역기구와 함께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은 세계경제의 추세가 되었다. 2006년 9월말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중인

FTA가 무려 133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자간 무역보다 양자간 FTA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WTO 등 다자무역협정이 많은 나라의 이해 조정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협상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폭이 좁아 효율성에 한계가 많은데 반해, 양자간 FTA는 협상기간도 짧고 협상조정 폭도 비교적 넓기 때문이다. 더욱이 FTA는 과거 WTO 발족 이전의 전통적 FTA가 목적으로 했던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넘어서 투자유치, 산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동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렇기에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EU)을 출범시켜 단일시장, 단일화폐로 나가된 것도 경제통합시장을 창출하여 경제성장과 국민후생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내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시장에 대응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의 무역구조가 보완적일수록 양국간 무역량이 많아지게 마련이고,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두 나라 제품들의 가격차가 관세, 운송 등 유통비용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이상 양국간 교역량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도 무역구조가 10% 더 보완적이면 무역이 1.16%p 늘어나고, 수출구조가 10% 더 유사하면 무역이 0.3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³⁾ 따라서 교역확대를 통한 고도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이루어왔던 한국 역시 자유시장의 확대폭이 증가하면 할수록 유리한 것이고 FTA라는 새로운 자유무역구조를 확립하고 확대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지체했던 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한국이 FTA를 통해 다시금 경쟁력을 증강하고 꾸준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FTA중심국화 정책’을 택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하여 우회 수출활로를 찾았듯이 한국이 미국과 FTA를 맺어 다른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FTA를 맺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2005년 한-일간의 FTA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일본 및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경쟁에 있어 국내 혹은 내부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시장규모는 일본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중국의 3분의 1에 가까운데 규모가 작은 한국으로서는 FTA체결로 FTA 상대국들의 시장까지 통합해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부시장의 확대는 고속경제성장을 재개시켜 주고 국내외 기업의 직접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경제성장을 더욱 가속시킨다. 그러한 경제성장의 결과 취약부분을 위한 투·융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취약부분의 생산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FTA체결로 취약해질 것이라 우려되는 농업부문과 같은 경제부문도 활성화되어 고용과 소득이 함께 향상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⁴⁾

3) LG경제연구원, 『한미FTA의 경제적 의미와 협상 포인트』(2006.6.28), p.35

4) 김정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유기업원, 2005), pp.323~326

2. 한-미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94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었을 때 우리 경제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갖고 바라보아야 했다. 미국시장을 두고 많은 상품에서 멕시코와 경쟁해야했던 한국으로서는 관세없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멕시코를 부러워했고, 멕시코를 뛰어넘는 산업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우리 상품이 미국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실제 미국과의 FTA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하나로 해외직접투자(FDI)의 증가 변화를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을 잘 알 수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하지 않은 호주, 싱가포르 등도 미국과의 FTA체결 후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미국으로부터 FDI 증가율

국가	대비기간		미국으로부터 FDI의 연평균 증가율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칠레	1990~2003	2004	6.04	10.61
싱가폴	1990~2003	2004	11.84	15.19
호주	1993~2003	2004	20.76	84.30
캐나다	1990~1993	1994~2004	0.20	19.18
멕시코	1990~1993	1994~2004	15.86	29.22

자료: 이준규, “미국이 맺은 FTA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따라서 한국 역시 한-미FTA 체결로 인한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로 거래비용이 낮아짐으로써 한국 내 생산유인이 높아지게 되어,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과의 FTA체결은 국가신뢰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미국외의 국가들의 투

자 확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석 보고서 따르면 한-미FTA로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가 향후 약 50억 달러에서 122억 달러 정도가 늘어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 규모 역시 약 225에서 28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⁵⁾ 또 한국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도 향후 15년간 연평균 23~32억 달러의 추가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치 가능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⁶⁾

FTA체결은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 및 고용 증가, 후생 수준 증대 등 보다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기술의 상호 보완을 통해 생산량이 증대하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냄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기술 제휴로 국내 부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국에 국내에 이러한 토대가 구축되면 투자를 촉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우리나라의 산업별 성장률 및 GDP 대비 비중

구 분	1990년대	2000년대	2001	2002	2003	2004	2005
총GDP 성장	7.7 (100.0)	5.2 (100.0)	3.8 (100.0)	7.0 (100.0)	3.1 (100.0)	4.7 (100.0)	4.0 (100.0)
농림어업	1.9 (6.8)	0.4 (4.1)	1.1 (4.5)	-3.5 (4.1)	-5.3 (3.8)	9.2 (3.8)	-0.1 (3.3)
제조업	9.3 (27.1)	8.4 (27.9)	2.2 (27.6)	7.6 (26.9)	5.5 (26.4)	11.1 (28.6)	7.0 (28.4)
전기· 가스·수도	10.7 (2.1)	7.8 (2.6)	7.2 (2.7)	7.7 (2.6)	4.7 (2.7)	6.6 (2.4)	8.0 (2.4)
건설업	7.3 (11.6)	2.6 (9.0)	5.5 (8.6)	2.8 (8.6)	8.6 (9.6)	1.8 (9.3)	0.1 (9.2)
서비스업	7.1 (51.7)	4.2 (56.2)	4.8 (56.3)	7.8 (57.5)	1.6 (57.2)	1.9 (55.6)	3.0 (56.3)

자료: 김관호, “한미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한국경제연구원, 2007)

5) 국민경제자문회의,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2006.12), p.16.

6) 재정경제부는 2007. 4. 30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대한 보고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분석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FTA의 가장 큰 효과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다. 보다 싼 자동차, 보다 싼 쇠고기 등 시장개방에 따라 여러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실질소득도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값싸고 질 좋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이 소비자 시장에 들어와 국민후생이 증대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영세 농업인의 경쟁력 저하와 퇴출이 예상되나, 이 역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됨으로서 한 단계 높은 산업구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과의 FTA는 금융 등 다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수반하게 마련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제도 선진화와 선진 기업들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분야는 <표-3>에서 나타난 성장률과 GDP비중의 변화추이를 볼 때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다. 따라서 한-미FTA 타결의 배경도 한국이 이들 분야의 특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선진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아직 국제경제에서 작은 경제권인 한국으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통한 단일 시장 창출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한-미FTA는 국내 제조업에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완화로 인한 수출증대, 국내시장 개방 확대에 의한 수입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다. 자동차, 철강산업, 섬유산업 등의 분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승용차와 화물차는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산업의 경우, 관세 폐지에 따르는 수출물량증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미국의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완화되어 수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섬유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역시 관세 폐지로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계산업, 화학제품 등의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것은 한-미FTA로 기계산업의 관세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반기계, 전기기계, 금속분야에서 모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한-미FTA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경쟁력 향상을 이끌면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6%대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수준인 67%대에 10%포인트 이상 미달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64%대로 OECD 평균수준인 69%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은 한국보다 미국이 2.19배나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의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⁷⁾ 그 외에도 한-미FTA는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김관호, 한미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결과에 평가 및 의의(한국경제연구원, 2007)

즉, 한-미FTA의 체결로 한국의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제도, 관습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가속화시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미국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미국 신규시장 진출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FTA가 한국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한-미FTA의 체결은 경쟁력이 약한 부문과 강한 부문 사이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산업재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농업을 포함한 피해부문에 대한 대응 비용을 국민모두가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이 미국 경제의 변화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한-미FTA로 인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⁸⁾ 하지만 이는 단기적 측면에서 나타날 부분적 문제일 뿐이지 한-미FTA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상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물가의 하락과 소비가능 재화의 증가 및 성장촉진으로 국민의 실질소득과 후생을 증대시키면서 절대적인 빈곤계층 축소에 기여하며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 생산성 증가가 높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경우 고용증가와 함께 산업종사자의 소득증가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쟁과 제도 개선, 선진기술 및 자본 도입 등을 통해 혁신 선도 업종의 성장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선도업종에는 한국산업의 성장잠재력 및 파급효과가 큰 IT산업, 자동차, 지식집약 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⁹⁾

8)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선진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미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2007.3), p.6

9) 차문중,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p.58

III. 한국 사회에서 반미세력의 본질과 의미

자유무역이 가져올 생산량 증가나 고용창출, 경제구조 고도화, 그리고 소비자 후생 수준 향상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집단적 저항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만큼 크고 강하다. 한-미FTA 협상 진행중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폭력적 시위를 감행했던 FTA반대세력들은 협상이 체결되고 2007년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자 이제는 비준저지를 향한 폭력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007년 11월 11일에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2만 4,000여 명이 서울 도심에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며 돌을 던지고 불을 놓는 등 극렬한 폭력집회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FTA 반대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계해 ‘FTA 반대’ 연호를 주장하고 있는데서 보듯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이라기보다는 정치투쟁으로 보여진다.

1. 반미세력의 형성과 확산

미국은 한국에게 지난 60여년의 역사에서 해방과 독립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이면서도 한국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해온 유일무이한 파트너였다. 건국 직후에는 미국의 원조가 한국 경제에 절대적인 몫을 차지했고, 6.25전쟁 때는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며 4만에 달하는 미군 병사를 희생시키는 등 한국과 고통을 함께 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반미운동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극소수 인사를 제외한다면 찾아보기 어려웠었다. 물론 1960년의 4.19운동과 1970년대 학생운동권 및 일부 지식인 계층에서 반미를 부르짖는 행동이 간헐적으로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더구나 이 시기의 반미운동의 특징은 기존의 대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의 수준에 불과했다.¹⁰⁾

한국사회에서 반미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조짐이 보인 것은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 전선(남민전) 사건이었다. 남민전은 강령 제1조에서 『미·일을 비롯한 국제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체제와 그들의 앞잡이인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한다』며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노선을 따랐다. 남민전의 이런 성향은 북한의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5차 당대회에서 “남조선혁명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해방 혁명임과 동시에 미 제국주의들의 앞잡이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

10) 1980년대초까지 한국사회에서 대중적 반미태도는 없었다. 한-미 수교 100주년을 기념한 지난 1982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60.6%가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지목했다.

공관료와 그들의 파쇼적 지배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는 주장과 전적으로 맥을 같이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남민전이 김일성의 전체주의사상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에게 바치는 서신과 보고문을 수차례 작성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남조선은 패망한 일본 제국주의 자리를 빼앗아 미군이 상륙한 날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앞잡이에게는 지상천국으로 되었으나 모든 남조선 인민들에게 그네들의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¹¹⁾

남민전과 북한의 대남조직에 의한 활동이 한국사회의 반미운동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들 남민전 잔여 세력들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반미세력들에게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 운동권 세력이 반미반제국주의 투쟁을 주요 의제로 삼도록 했다. 남민전이 뿌린 친북반미적 「주체사상」의 씨앗은 1980년대 386주사파로 썩이 트고,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로 확대된다. 1980년의 대다수 학생운동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 규정한 ‘미국 제국주의론’과 ‘반외세주의’ 이념노선을 추종하면서 미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급격히 확산시켰다.

이때부터의 반미주의는 그 이전의 반미와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이전의 반미운동이란 극렬한 친북조직에 한정된 것이었거나 미군철수 문제나 한미간 통상마찰문제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개진을 중심으로 일회성적인 것이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반미운동은 공산주의 세력인 전체주의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매개로 한국사회에 대한 근본적 체제전복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학생운동세력은 투쟁의 논리와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을 대중적으로 수용시키고, 그 혁명노선을 대중운동과 한국사회에 적용시키고자 한 것이다. 당시 주사파 지하조직으로는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이 있었다.

미국을 제국주의적 주적국가로 규정짓고 이에 대항하는 세력의 중심을 김일성체제로 보는 ‘주체사상’적 논리로 무장한 운동권 세력은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의 한반도 근대사 100년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요, 제국주의에 대한 민중 투쟁의 역사다. 한국사회는 미국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가 파쇼적으로 지배하는 식민지사회다’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의 핵심 논리이자 당시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가장 큰 논지는 한국의 분단이나 민주주의의 미성숙 등 모든 문제가 주적인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본다.¹²⁾ 특히 친북적 학생운동세력은 1980년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을 반미운동의 확산수단으로 활용했다. 미국은 광주민주화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왔음에도 학생운동권은 미국을 민주주의발전의 탄압세력으로 몰아세웠던 것이다. 한국의 학

11) 김성욱, 『대한민국 적화보고서』(조갑제닷컴, 2006), p.106

12) 이동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과 80년대 학생운동』 〈자유민주연구〉, 자유민주연구학회 (2007)

생운동권의 대미관이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각은 전체주의 북한이 대남전략으로 규정
한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¹³⁾ 이런 반미적 시각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에서 개최됐던 광복
60년 기념전시회가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회고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반미선동
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천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⁴⁾

북한의 ‘반미 반제국주의’ 노선에 영향 받은 반미운동가들은 광주사태를 진압한 한국군이
미국의 승인으로 가능했다며 미국에 대한 저항의 불씨를 만들어냈다. 그런 반미선동적 차원
에서 감행된 것이 미문화원 방화와 점거 농성이었다. 일례로 1980년 12월 광주의 미국문화
원 방화 사건은 화재 규모는 소규모였으나, 향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고 그 이후 미국문화
원에 대한 방화, 점거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광주 미문화원은 1989년 5월까지 이 지
역의 학생들로부터 무려 28번의 공격을 받았다.¹⁵⁾ 그 뒤 1983년 11월 레이건 대통령 방한
반대시위, 1985년 전두환 대통령 방미 반대시위가 있는 후 1986년 5월 인천 신민당 개헌집
회에 맞추어 전개한 5.3시위에서는 ‘미제 축출(美帝 逐出)’이라는 구호를 파쇼타도와 함께
처음으로 외쳤다.¹⁶⁾ 심지어 86년 4월에는 이재호, 김세진 등 학생운동가들이 ‘미군철수’ 등
을 내세우며 분신자살을 감행하기까지 했다.¹⁷⁾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사회의 재야 운동단체와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이들 반미세력의 운동은 전통적 한국인의 대미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¹⁸⁾ 실제로
1987년 11~12월의 기간에 약 15일간 전국의 4년제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16개
대학 1,185명의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들의 반
미의식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
한 설문에서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전체의 57.4%를, “미국의 식민
지”라고 응답한 자는 40.9%를 차지하고 있어 총 98.3%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미국에 비판
적이거나 반미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13) 『광주인민봉기는 파쇼적 유신체제를 부활시키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 책동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
의적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반미반파쇼 민주항쟁이었으며 원수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들을 무장하고 괴뢰도당의 방대한 정규무력에 맞서 결사항전을 벌인 대중적인 무장봉기였다』(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p.153

14) 2005년 8월 14~28일 보름간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시련과 전진(Trial and Advance)’이라는 광복
60년 기념전은 <민주화·산업화의 두 축으로 풀어보는 대한민국 해방 60년 역사> 주제를 소재로 하였으나 “광주사태 책
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는 1982년 3월 18일 부산지역 대학생의 부산미문화원에 방화 사건을 민주화운동에 커다
란 의의가 있는 것으로 부각시켰다.

15) 김진웅, 『한국인의 반미감정』(일조각, 1992), p.93

16) 심양섭,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삼성경제연구소, 2005), p.41

17) 1986년 3월 반전, 반핵 슬로건이 대학 2학년생들의 전방입소훈련 반대를 촉구하는 서울대학교의 한 시위에서 처음으
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여러 입후보자들은 주한미군과 미국 핵무기의 철수, 한미 양국군의 대규
모의 틸스퍼리트 훈련 중지 등을 요구하는 강령을 내걸었다. 4월 말 서울대와 성균관대에서 있는 시위에서 학생들은 학
생교련을 ‘양키용병훈련’으로 매도했고 이 구호는 곧 다른 대학의 시위에서도 나타났다. 김진웅, 앞의 책, p.106

18) 김광동,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자유기업원, 2003), p.9

이 무려 15.9%를 차지했고, 학생운동에 있어서 사회혁명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16.4%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조성된 ‘한국은 미국의 제국주의 국가이며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한국사회는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탈피하는 반제, 반미 운동에 나서야 하고 자유민주적 시장경제까지도 폐기할 수 있다’는 한국사회의 반미적 분위기¹⁹⁾는 198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반미=친북’으로까지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를 장악한 이들 주사파 지하조직들의 강령과 결의문, 맹세문 등을 비롯하여 1990년 결성된 「자민통」의 가입결성식에서는 「한민전」의 강령을 받아들이는 선서와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 만세!』 등을 외쳤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과 맹세문이 이제는 보편적 결의사항이 되었다.²⁰⁾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주체의 깃발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하겠습니다』

한국의 해방, 건국, 공산주의 저지 및 변영체제 형성에 기여해 온 미국이었기에 한국사회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반미운동이 이처럼 급격하게 대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체제의 존망을 걸고 대치하던 북한 전체주의체제가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을 최대 전략목표로 치중해온 결과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단일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한국에서 미국을 ‘외세’로 규정지으며 한민족의 ‘배타적 민족주의’의식을 고조시키고 이용한 것이 유효했던 것이다. 이들 세력들은 국민들에게 ‘친미=사대주의=타도대상’이라는 등식을 제시해 놓고, 민족이나 미국이냐는 식으로 양자택일식의 이분법적 강요를 통해 ‘반미’ 선택을 강요했던 것이다.²¹⁾ 여기에 한국정치의 비민주성이나 미성숙까지도 미국 탓이라는 책임전가의 논리가 한국사회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미운동 주도세력들은 북한 김일성의 제국주의적 미국관을 그대로 추종하면서도

19) 유석춘,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천통과 현대, 2002), p.223

20) 김성옥, 앞의 책 p.232

21) 김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 집권자는 미국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고 밝혀왔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시익에 맞는 논리와 용어를 변형하는 전술을 통해 사회 전반에 반미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반미세력들은 직접적으로 북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변혁’ 혹은 ‘혁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주’, ‘주체’, ‘민주’ 혹은 ‘민족’ 등의 용어를 활용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한-미FTA 체결 반대, 여중생 사망사건, 주한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각종 대미투쟁을 선전, 선동하는 과정에서 대미투쟁 그 자체를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만들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인사들을 민주화에 반하는 세력으로 낙인찍는 방식 등을 통한 반미적 사회 만들기를 주도해왔다.

2. 햇볕정책과 반미정서의 대중적 공고화

1990년대 초반 들어 한국과 동구권의 외교관계 수립, 중국 및 소련과의 국교수립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북한과 일부 친북반미세력들은 새로운 논리와 용어가 필요했다. 이에 북한은 ‘민족’을 새로운 대남전략 개념으로 설정했고, ‘반외세’, ‘반미’를 강조하는 새로운 대남정책을 구사하자, 남한 내 친북반미세력들의 모든 노선운동은 이를 토대로 한 ‘반미’로 결집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민주화 운동’이란 미국에 대한 반대운동이고 그것이 곧 민족자주화 운동이라는 인식을 고착시켜 왔다.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친북반미세력들의 반미운동은 남북한 긴장완화, 남북한 자주교류,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구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으나 이는 반미운동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작업이기도 했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 이래로 친북적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미세력이 급부상하게 되었고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미국에 대한 역사 및 현실 왜곡을 토대로 반미세력 규합에 나서게 되었다.²²⁾

좌파운동적 차원에서 확대되어 오던 반미운동이 정부지원 속에서 대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 후반 및 노무현 정부 시기의 햇볕정책의 결과다. 「국민의 정부」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착된 햇볕정책은 대미인식과 관련하여 한국민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햇볕정책’은 한미동맹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좌파적 정부는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라는 정부운영지침에 따라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의 위상과 대미의식을 전반적으로 바꾸었고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미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부추겼다. 또한 한국의 좌파세력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의 보호와 지원 아래 미국에 대한

22) 반미운동세력의 대표적 지식인을 자처하는 강정구는 미국과 관련하여 「미국을 민주주의의 사도라 한다. 그러나 해방되자 곧바로 이 땅을 지배한 미군정은 유레가 드문 경찰독재국가였다…그 이후 이승만의 냉전독재, 박정희의 냉전·개발독재, 광주학살을 딛고 일어난 전두환 군부독재 등의 지속적인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강정구, 『미국을 알거나 하나요?』(통일뉴스, 2006), p.59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반미운동의 공식화와 대중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역사적으로 ‘반미정부’라고 불릴 만큼 반미주의 고양에 치중했다.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 꺾판쳐도 된다”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던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및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냐?”²³⁾ 등과 같은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남발하여 한미동맹의 의의와 위상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였다. 과거 민주화 운동 독점을 통해 투쟁력과 조직력을 길러왔던 이들 반미세력들은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편승하여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부상했으며, 이분법적 논리로 자신들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통일’, ‘사대주의’, ‘반민족’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햇볕정책옹호론자들은 미국이 마치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북한 경제론을 부추기며 남북간의 평화기조를 뒤흔들려고 하는 반평화, 전쟁세력으로 매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3. 반미운동의 목적과 활동방식

반미운동세력의 활동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체제 변혁을 통한 한국체제의 친북화와 사회주의화로 귀결된다. 반미세력들은 그들이 옹호하는 북한의 공산전체주의체제에 대한 국민적 환상을 한국사회에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북한옹호 인사들이 주요 공직에 포진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친북적 분위기 조성은 보다 가속화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소위 ‘좌파386세대’로 일컬어지는 대다수 학생운동권 세력들이 정·관계에 대거 진입하면서 이러한 친북옹호적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었다. 현재 대략 600여 개로 추정되는 반미단체들은 미국이 연계된 사건들마다 개입하여 사건의 본질이나 사실과는 무관하게 반미주의를 선동하고 있다. 반미세력들이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일방적 비난과 반대 움직임은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된다.

(1) 주한미군 반대를 통한 반미운동

반미주의자들은 한국이 미군주둔으로 인해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고, 핵실험을 한 북한보다도 오히려 미국

23) 2006.12.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 발언 중

이 핵전쟁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던 한반도 핵위기, 서해교전 등에 대해서도 그 도발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거나 남한이라고 주장하는 등 최근의 명백한 사건까지도 실상을 왜곡하여 선전하고 있다. 이런 반미세력들에 의해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반미 공세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다.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의 남침 도모를 저지한 대북 억지력의 근간이 주한미군이었음에도 반미세력들은 한반도 역사의 모든 잘못이 미국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미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을 한반도에서 패퇴시키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반미세력은 i) 현재 미군이 가진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해야 하며, ii) 한미동맹을 동북아 차원의 지역동맹으로 전환해야 하고,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초래해 주변국들 간에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것이기에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 전환은 저지해야 하며, iii) 한국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 분쟁이 발생할 때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입장에서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⁴⁾ 이 같은 주장은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동맹군으로서의 주한미군 지위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철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미세력들은 미군부대의 환경문제, SOFA 개정문제, 여중생장갑차사망사건에 의한 촛불시위 선동,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등 주한미군과 관련해 문제를 부풀려 한국사회에 심각한 혼란과 분열을 부추겨 왔다. 최근 수도권에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은 폭력투쟁의 연속이었다.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된 미군기지이전 범대위는 통일연대, 민중연대, 한총련, 민주노총 등 130개 단체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구실을 앞세워 해당 지역에 한반도기를 꽂아놓고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벌였다. 2006년 5월엔 시위대 1,000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철조망을 뜯어내고 쳐들어가 초소를 부수고 막사를 짓밟고 한국 국군장병들을 죽봉과 각목으로 두들겨 수십 명을 부상시키기까지 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를 외치고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오히려 공권력 무시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2) 세계화 반대를 통한 반미운동

반미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반대를 내세우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화란 ‘미국 중심의 세계화’라는 입장을 갖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반미세력들은 2001년 4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

24) 심양섭, 앞의 책 p.64

의(대안연대회의)를 발족한 바 있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종함으로써 국부의 엄청난 유출과 경제주권의 상실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확대를 요구하였다.²⁵⁾ 특히 이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강대국들의 약소국 침탈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미주의적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FTA란 미국에게는 경제적·정치적·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들의 경제를 미국 경제에 통합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⁶⁾ 이러한 견해는 현재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정책을 강대국들만의 동맹체제 형성이라는 인식의 틀로서 규정지어 미국과 협조하는 나라들의 반발과 적대심을 부추기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3) 역사 왜곡과 문화적 선동을 통한 반미운동

한국사회의 반미분위기 조성은 한국현대사에 대한 왜곡과 각종 서적, 영상물, 노래 등 문화산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령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통일하려면 미국 군대부터 몰아내야 한다’는 식의 노골적 반미서적을 청소년권장도서로 선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미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파쇼거나 독재였고 그 뒤에 미국이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을 몰아내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를 확산시켜 왔다. 이는 우선 미국을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한 다음,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²⁷⁾ 이는 김일성이 1993년 8월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기관인 범민련 3호청사 확대에서 지시한 다음과 같은 교시에서도 확인된다.²⁸⁾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에 대한 이적 규정을 철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을 사대 매국적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파쇼 폭압기구 해체 투쟁과 함께 범민련을 통일 애국단체로 부각시키는 합법화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25) 심양섭, 앞의 책 p.96

26) 정인교 편,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해남, 2006), p.400

27) 이동호, 앞의 책 p.27

28) 2004년 12월 23일 김상철 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이 <북한주민 헌법적 결단에 의한 통일론>이란 주제로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가진 세미나 발표문에 게재된 내용이다.

1987년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백기완의 「우리모두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는 ‘미제국주의의 해체와 함께 그 모랏돈(독점자본)의 막심(폭력)을 해체하여 세계해방의 알짜, 노나메기 세상을 빚고자’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노골적 반미주의를 표출하고 있다.²⁹⁾

『미군 주둔은 우리나라를 다시 짓밟는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이요, 우리들이 싸워서 거머쥔 해방까지를 죽이는 범죄였습니다...지금 우리들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기작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땅에 있는 미국 군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 미군부터 몰아내야 합니다...미군이 이땅에 있다는 것이 곧 침략이요, 전쟁이고 보면 통일이 된 뒤에도 미군을 이 땅에 놓아두겠다는 것은 불바다 전쟁으로 우리 겨레를 다 죽여서라도 온 삼천리를 거머쥐겠다는 수작이지 딴 것이 아닙니다』

또 2002년 여중생촛불시위 당시 「fucking U.S.A」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또라이 부시」, 「기특한 과자」, 「반미반전가」, 「반미출정가2002」, 「전쟁 한번 합시다」, 「주한미군에게 고품」 등 일련의 반미가요를 유행시켰다. 특히 그가 만든 「fucking U.S.A」, 「또라이 부시」, 「기특한 과자」 등은 2004년 9월 국보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통일연대 민경우를 통해 북한에 보내져 대남혁명기구인 한민전 473호의 자주민주통일의 광장란에 게재되기도 했다. 「fucking U.S.A」의 경우, 『야비한 나라, 더러운 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반대. 이제는 외치리라 양키 고 홈』 등의 가사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반미정서를 확대시키는 영상물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공중파 방송 등의 기획물이나 뉴스관련 보도를 통해서도 확대되어왔다. 이같이 문화적 차원에서의 반미운동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반미정서의 확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29) 김성욱, 앞의 책 p.306

IV. 범국본과 한-미FTA 반대운동의 실체

1. 범국본의 구성과 주요 활동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지도부가 주축이 되어 2006년 3월 28일 발족되었다. 전국연합은 2006년 3월 제15기 대의원 대회에서 “한-미FTA저지투쟁이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 강화기도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라며 “한-미FTA저지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반미자주의식의 비약적 확산을 기하라”고 결의한 바 있다. 이 결의 직후 발족된 초기 범국본은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 등 총 10개의 각종 대책위원회 예하의 270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었다. 이후 2006년 말까지 범국본은 농축수산물, 교수학술, 금융, 공공, 영화인, 문화예술, 교육, 시청각미디어, 보건의료, 여성, 지적재산권, 소비자대책위, 학생, 환경 등 14개 부문대책위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확대 증가되었다.

범국본의 조직체계는 대표자회의를 필두로 정책기획팀, 선전홍보팀, 대외협력팀, 조직투쟁팀, 국제연대팀 등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국본은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정광훈(민중연대 상임대표), 문경식(전농 상임의장),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임대표로 하며, 송두율석방대책위 상임대표를 지낸 서울대 김세균 교수 등이 산하 교수학술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중 오종렬, 정광훈, 문경식 등은 모두 전국연합의 간부로 활약해 왔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범국본 출범 직전인 2006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약 340회의 한-미FTA 반대시위가 열렸다. 주말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집회가 거의 매일 열린 것이다. 경찰은 이 기간 중 26만 명의 시위대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³⁰⁾ 특히 2006년 11월 22일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위대 7만 4,000명이 13개 시도에서 한꺼번에 시위를 벌이고 7곳의 시청과 도청을 습격했다. 대전에선 충남도청을 습격하여 기물파손과 방화를 감행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범국본이 농민을 선동하고 유관단체들이 적극 가세한 이른바 ‘기획 시위’였던 것이다.³¹⁾ 이러한 불법 집회와 시위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³²⁾

30) 내일신문, 2007년 4월 6일자

31) 조선일보, 2006년 11월 23일자

3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년 1월 대규모 집회와 시위의 연간 사회적 손실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53%에 해당하는 12조 3,000억 원이나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아일보, 2007년 4월 10일자.

범국본의 ‘발족선언문’을 보면 이들의 한-미FTA 체결에 대한 반대논리가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친북좌파세력의 반미주의 전략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주요 내용

‘한-미FTA’라는 악령이 한국사회를 떠돌고 있다…지난 몇 달간 한반도를 배회하던 ‘한-미FTA’라는 악령이 이제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국사회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상륙작전은 조만간 눈 깜짝할 사이에 완료될 것이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을 앞세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 한국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점령해 나갈 것이다…‘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양 날개…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의 한 몸에서 나온 양 날개이며,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사회를 완전 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참여정부의 위정자와 통상관료, 재벌, 보수정치인, 보수언론들만이 민심을 외면한 채 한-미FTA를 찬양고무하며 민중을 배반하고 매국의 길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한-미FTA를 강요하며 경제침략과 수탈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 맹신자들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결국 이 선언문은 한-미FTA에 대해 국익과 국민적 합의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제국주의’라는 시각에 따라 한-미FTA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점령’, ‘매국’, ‘수탈’, ‘지배전략’, ‘항쟁’ 등의 용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국본은 주한미군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의 상징으로 보고 FTA체결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의 상징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한-미FTA 찬성세력’을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적인 지배를 가속화하는 미국에 대한 친미세력으로 규정지으며 한-미FTA반대운동을 반미운동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범국본의 한-미FTA에 대한 기본인식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전 세계 미군의 기동군화와 궤를 같이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개입중대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³³⁾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의 세계지배구도에 따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를 통해 각 대륙의 군사요충지를 동맹체제에 예속시킨다는 것이다. 한-미FTA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결부시키는 주장은 논리적 연결성이 약한 것임에도 단지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여 반미 선동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미FTA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결부시키는 이들의 주장은 반FTA운동을 ‘반미’운동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³⁴⁾

33) 이각범, 『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선진화국민회의, 2006), p.50

2. 범국본의 핵심단체와 성격

2006년 이후 범국본의 핵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범국본의 성격과 반FTA운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민노총, 민노당, 전국연합, 한총련 등 범국본의 핵심단체들이 그간 각종 집회 및 시위를 통해 표출해온 미국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보면 이들은 범국본을 통한 반FTA 활동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미 운동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 친미정권으로 간주하며 정권퇴진투쟁을 주장하는 한편, ‘민족공조’론 속에 친북연대를 강조하고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전개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는데 주력해왔다.

<표 4> 무역규제 정도와 경제성장

순위	단 체 명	비 고
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2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
3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조준호 위원장
4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 전국농민연대	※문경식 상임의장
5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7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0	민주노동당(진보정치연구소)	
11	환경운동연합	
12	참여연대	
13	민족문학작가회의	
14	학술단체협의회	
15	민족문제연구소	
16	회진보연대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8	민주언론시민연합	
19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회협의회	
2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34) 이상현,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pp.88~89

주: ※는 범국본 공동대표를 겸함

2007년 11월 현재 한-미FTA 반대 핵심단체들의 과거 활동에 입각하여 단체의 규모와 위상, 범국본에서의 참여 수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참여 단체 현황은 <표-4>와 같다. 이들 단체들이 그동안 지향해온 활동의 공통점은 크게 (i)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 부정, (ii) 반자유시장경제적 활동 (iii) 북한 김정일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옹호와 반미주의라는 공통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체제, 역사, 정통성에 대한 부정

반FTA 운동세력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대변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방안보다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을 우선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방안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실천연대, 한총련 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을 포함한 남북해외의 애국동포들은 그동안 조국통일 3대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있고, 상호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의 나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 확산해 왔습니다. 남북 어느 일방의 체제로 흡수하거나 두 개의 나라로 아예 합법적으로 분리하자는 국가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은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결코 올바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취해왔던 것입니다」³⁵⁾

「우리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함에 있어 반드시 지키고 의거해야 할 통일의 헌장은 무엇인가?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³⁶⁾

반FTA 운동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해서도 그 민족사적 의의를 대한

35) 민주노총, 『노동자통일대회대토론회자료집』(2007.7.3), p.43

36) 한총련 제14기, 『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조국통일이론)』(2006.8), pp. 2~4

민국보다는 북한에 더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제시한 책자를 보면 남북한 통일방안과 평화보장과 관련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선지역으로부터 일체의 외국무력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전쟁당사자인 유엔군의 주둔아래, 유엔이 개입하고 감시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FTA 운동세력들은 남북분단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민족적 정통성을 북한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우호적 역사왜곡은 한총련의 주장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통일 독립을 원했으며 좌우의 대립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이승만 등의 일부 사대매국 세력에 의해 분단이 자행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분열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입니다. 38선을 긋고 들어와, 우리 민족의 치열한 항일투쟁의 성과와 민중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건국 사업을 부인하고, 친일세력을 되살린 외세,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려 했던 외세, 이것이 바로 가슴 아픈 우리 민족 분단의 진정한 원인인 것입니다」³⁷⁾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 건국 역사의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즉 반FTA 운동세력들의 반대한민국적 주장과 활동의 이면에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 김일성-김정일 개인독재체제에 역사적 정통성 및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반자유시장, 반자유무역 활동

반FTA 운동세력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 반자유시장경제 노선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해 소수의 가진 자(유산자계급)가 대다수의 못 가진 자(무산자계급)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로 간주하며, 한국사회는 자주독립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이처럼 ‘억압’, ‘착취’의 관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억압적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혁명적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로동당규약 내용을 지지, 고무하는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

37) 한총련, 『여름일꾼수련회 자료집』, p.185

또 이들은 한국사회를 ‘미제’의 식민지정권인 남한정권이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대다수의 불쌍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라고 비방한다. 그리고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 ‘신자유주의 파시즘체제’ 등으로 묘사하며 모순투성이의 사회로 매도하고 부정한다. 이 같은 시각은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들 5%의 대한민국!...그림에 떡을 놓고 살기 좋은 선진국 5%의 지배층에 나머지 95% 노예가 되는 나라! 자유와 정의가 5%만 차고 넘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들의 나라 5%의 대한민국!」³⁸⁾

「악의 원천 미국 놈과 양도깨비 들어보라! 일본 놈들 제국주의 관세없는 통상조약 조선 벌써 식민지국! 양키들의 제국주의 관세없는 자유무역 대한민국 노예나라!」³⁹⁾

이런 시각에 따라서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FTA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론자들에 있어서 세계화는 1970년대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자본가들의 전략적 일환으로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선진국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주도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한-미FTA를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FTA로 규정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한-미FTA 자체가 신자유주의이자 세계화로서 그 속성상 주권의 공동화를 수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⁰⁾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규정한 세계화에 관련되어 주장되는 제반 병리적 현상의 모든 시발점이 한-미FTA인양 확대 해석하고 있다.⁴¹⁾ 이들은 한-미FTA와 관련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거의 맹신적이고 무책임한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국민회에서 발행한 책자의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자유무역은 신앙이 아니다...지금과 같은 모양의 자유무역, 다시 말해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통상전쟁은 반드시 그 패자를 낳는다. 국가는 이들에게 자유무역의 떡고물을 떼어다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안겨다

38) 전국농민회총동맹, 『그들 5%의 대한민국!』(2006. 1. 9)

39) 전국농민회총동맹, 『악의 원천 미국 놈과 양도깨비 들어보라!』(2006. 1. 14)

40)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강출판사, 2007), p.20

41) 이시욱,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2006), pp.25~26

줄지 모르나,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양극화는 비단 일국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의 자유무역이 보편화된 이래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만 간다.」⁴²⁾

(3) 북한 김정일전체주의에 대한 옹호

반FTA단체들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급투쟁적 인식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대한민국 정권과 자본가계급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 및 민중들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실제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투석 및 공공기관 방화점거, 기물파괴, 심지어는 방화, 살인 등으로 얼룩져있는 이들의 투쟁 양상을 볼 때, 그들의 지향점이 FTA에 대한 정책적 반대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미FTA에 반대 시위의 폭력성을 정당하게 진압하려는 정부에 대해 본질적 자유권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⁴³⁾

특히 이들 반FTA 단체들의 주류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이는 한국체제를 전복하고 자유민주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내지 ‘김정일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례로 전교조 부산지부의 『2006년 통일학교 자료집』을 보면 일방적으로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찬양, 수용하며 이를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정치의 행군이었습니다.」⁴⁴⁾

그 외에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종일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장애물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미 FTA 체결국면과 맞물려 ‘자주와 예측’, ‘분단과 통일’, ‘애국과 매국’의 대결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의 이러한 편향성은 결국 한국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고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들의 철저한 북한노

4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앞의 책 p.58

4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앞의 책 p.21

44) 전교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2006)

선추종은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교란을 가속화시켜 남북협상이나 국제협상시 우리정부의 신인도와 대표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국에는 국가이익을 훼손시켜 우리민족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3. 범국본의 반미적 반FTA운동

범국본을 구성하는 단체들의 반미활동은 현재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 반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각 단체들은 범국본을 구성하기 이전부터 각종 시위, 연대활동 및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반미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왔다. 범국본에 참여한 단체들 중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단체들은 적어도 1990년대부터 반미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단체들이다. 이들은 주한미군철수론, 민족공조론, 반세계화론 등을 앞세워 한국 사회의 현실이나 자유무역이라는 보편적 방향을 무시하거나 부정해왔다. FTA 반대운동 자체를 애국운동으로 미화하는 등 한국사회를 반미운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범국본 유관 핵심단체들의 과거 및 현재 반미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1983년 설립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계승으로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1991년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전국연합은 ‘민족’과 ‘민주’를 내세우며 가장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 체제인 김일성-김정일체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옹호하며 미국을 반대하는 노선을 걸어온 단체로서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서 지배하고 있으므로 식민지 상태인 한국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연합은 미국을 한국을 ‘식민지 지배체제’로 만드는 제국주의세력으로 규정짓고 주한미군 이전문제, APEC 반대, ‘효순 미션’사건 문제 등 미국이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반미적 활동을 주도해왔다.

2007년 현재 전국연합에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8개 부문단체⁴⁵⁾와 서울·부산·광주 등 12개 지역운동단체, 9개 참관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전국연합의 반미적 성향은 2002년 강령, 2006년 대의원대회 결의문 등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45) 소속 부문단체는 전국농민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반미여성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총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 통일중앙회의, 사월혁명회 등이다.

「반미자주화투쟁은 이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선봉이 되고 각계각층 모든 애국민중들이 함께하는 이 시대 최고의 애국운동으로 우뚝 섰다…무너져 내리는 식민지 분단체제를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의 책동은 날로 극렬해지고 있다…미국은 스크린쿼터 폐지와 한-미FTA 체결로 한국경제를 완전히 장악하여 식민지 지배체제 강화의 기반으로 삼고 나아가 통일된 민족경제의 형성을 가로막으려 획책하고 있다…그렇다!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은 지금 자주와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고 한반도를 영구히 지배하려는 음모를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착착 진행하고 있다」⁴⁶⁾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 작전권을 회수하며 미국 등 외국과 맺은 불평등한 군사협정을 폐기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모든 기지와 시설을 국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한다.」⁴⁷⁾

전국연합은 대규모 반미집회를 위해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활용해 왔다. 반FTA 범국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이미 2001년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2002년 「미군장갑차여중생 故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2005년 「빈곤을 확대하는 APEC반대·부시반대 국민행동」공동대표·「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등 지난 2000년 이후 조직됐던 대부분의 주요한 반미활동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아 반미집회를 주도해왔다. ‘반미자주화투쟁’을 이 시대 최고의 애국운동이라고 스스로 규정짓는 것에서 보듯 전국연합은 단체의 결성 목적이 반미주의 고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될 만하다.

(2)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총련은 1993년 ‘전대협’을 계승해 전국적 규모의 친북반미성향을 지닌 정치투쟁조직으로 결성되었다. 특히 1980년 이후 극렬 좌파적 학생운동권을 이은 한총련은 그 강령 제1조를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한총련의 반미노선은 2007년 한총련 정기대의원회 자료집이나 2006년 한총련 중앙위원회 총노선 최종안 등 각종 자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6년 대의원대회 결의문』(2006)

47) 전국연합, 2002.3.2 개정 강령 내용

「제15기 한총련 대중노선 1. 총적방향 <우리 민족끼리>기치 아래 반미반전, 6.25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대중적으로 펼쳐내고 반보수대연합 형성으로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자!」⁴⁸⁾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는 통일애국세력을 대표하는 통일실현 정권이나,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친미국 우정권이나에 의해 결정적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6.15공동위를 중심으로 통일애국세력이 조직적으로 총단결하여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국민대중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대중적 토대와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선차적이다.」⁴⁹⁾

한총련은 한국사회를 미국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족해방투쟁을 구현하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조직’임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목표는 북한이 1970년대 제5차 당대회를 대남혁명 3대목표로 제시한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조국통일 촉진투쟁’에 입각한 것이다. 한총련 강령상의 ‘전문’에서 보듯 한총련은 한국 현대역사를 독재권력·독점자본·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통일과 해방투쟁사로 규정한다. 실천 강령에서도 ㉠ 반미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 친미파쇼 식민지통치 척결과 완전한 민중의 사회주의화, ㉢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연방제 방식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투쟁으로 존재 목적을 집약시켜왔다.

한총련의 제14기(2006년) 총노선에서는 자신들을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자처하면서 이를 위해 「반미투쟁의 기본방향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맞추고 가야하며」, 특히 「2006년 상반기 평택미군기지 확장 투쟁을 반미투쟁의 기본흐름으로 밀고 나가자」고 결의한 바 있을 만큼 각종 반미투쟁을 단체의 존재목적으로 삼고 활동해왔다.

한총련은 반미투쟁과 ‘친미세력’ 척결 및 ‘미국 제국주의 세력’과의 투쟁을 최고 투쟁목표로 삼고 북한 인권상황이 세계에 알려지는데 조직적인 방해활동을 취해왔다. 한총련은 2005년 12월 「반전평화미군철수청년학생연석회의」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당시 개최된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방해하였다. 오히려 대학로에서 소위 「미국과 수구세력의 반인권성 폭로사진전」을 갖고, 10일 대규모 북한인권국제대회 반대캠페인을 통해 “야만적 학살을 자행해 온 미국과 수많은 반인권행위를 저질러 온 보수세력은 인권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이번 대회의

48) 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2007. 2. 10)

49) 제14기 한총련, 『중앙위원회 총노선 최종안』(2006.3)

목적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며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북한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는 것조차 봉쇄하는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87년 여름, 노동자들의 노동투쟁과정에서 결성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이 시작되어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및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거쳐 1995년에 창립되었다. 민주노총은 2006년 4월20일 조합원 14만 명의 전국공무원노조를 산하단체로 받아들여 2006년 말 현재 총 조합원은 75만여 명에 이르렀고 산하에 629개 노조를 두고 있다. 조국의 ‘자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 민주노총의 창립선언문은 이 단체가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정치투쟁 및 반미투쟁을 조직의 주요 활동과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자! 자본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⁵⁰⁾

민주노총은 2006년 3월 8일 「신자유주의 반대, 4월 총파업투쟁을 선언하며」라는 성명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의 미국 자본의 후진국 수탈 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민주노총은 이 같은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반미전략의 일환으로 펼쳐온 것이다. 실제 2006년 4월 20일 평택 대추리 대추초등학교에서 가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당면한 반미자주통일투쟁의 중심고리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을 비롯하여 반북 전쟁책동과 민족분열 이데올로기 공세를 일삼는 미국과 수구 반통일세력에 대한 공세적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는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반미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당면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을 주축으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힘있게 전개한다」는 투쟁사업을 결의하고 투쟁과제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어 반미활동에 주요 사

50) 민주노총, 『창립선언문』(1995)

업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해왔다.

「6.15통일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만큼, 시대의 요구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분단대결시대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하고,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한미예속동맹은 폐기되어 통일조국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유엔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당면 과제가 보다 분명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6.15공동선언에 기초한 연방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당면 투쟁과제는 그 모든 것의 결집돌인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입니다」⁵¹⁾

민주노총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자위수단이라는 주장을 전개해왔다. 민주노총이 발간한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는 책자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깨고 있는 것이 한반도를 상대로 핵전쟁 연습 및 전쟁계획을 수립하는 미국 때문이고 세계 전쟁의 화근 역시 미국이며,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체제붕괴 전략과 한국 정부의 이런 대북전략 추종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4) 전국교원노동조합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주된 활동의 하나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현재 약 8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설립 당시 1989년 5월 28일 결성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을 화두로 내걸었으나 전교조의 성향은 이러한 참교육과는 무관하게 친북과 반미라는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한국사회의 교육현장을 전교조 이념의 실천 장소로 탈바꿈시켜왔다. 전교조는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반제국주의투쟁, 반외세투쟁을 전개할 것을 자기 목표로 삼아왔다.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 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⁵²⁾

51) 민주노총, 『노동자통일대토론회자료집』(2007.7.3)

52) 전교조,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2005)

전교조는 통일과 민족을 거론하며 김정일전체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미국과 맞서자고 선동하면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노예’, ‘분열’, ‘매국’이자 ‘죽음’이라고 선전한다. 그리고 ‘자주’라는 것은 곧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규정짓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라크전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중심으로 한 반전수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교장협의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전교조가 교실을 ‘반미·친북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⁵³⁾

「미국의 민족분열 정책, 대북 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만약 우리가 같은 민족 입장에서 북과 힘을 합쳐 미국을 밀어내고자 한다면 북미관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국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전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국에게 일격을 가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⁵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은 자신의 국익을 지키고 패권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지배를 영속할 수 있는 힘 있는 방안일 것이다…군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친미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⁵⁵⁾

전교조는 반미주의 활동과 함께 또 다른 활동 축을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옹호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교조의 반미주의는 항상 친북주의와 함께 쌍을 이루며 교육현장에 나타났다. 전교조 각 지부가 밝히고 있는 전국청소년 통일캠프, 통일문예한마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주통일교육 및 반전평화교육이나 통일연대나 민주노총과의 자주통일사업 적극 결합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김정일의 군사독재를 위한 정치선전 전략인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북한의 정치포스터를 각급 학교의 환경미화용으로 권장하고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 위상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조선현대역사’를 그대로 베낀 책자를 한국현대역사에 대한 교육용으로 전교조 간부교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⁵⁶⁾

53) 신동아, 『반전수업·낙선운동·시국선언…흔들리는 ‘교육중립’』, 2004년 8월호

54) 전교조,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2005.1.30)

55)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2001.5)

56) 전교조 부산지부, 『2006년 통일학교 자료집』(2006)

전교조의 친북반미적 시각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습 자료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전교조가 2005년 작성한 ‘4·3 사건 공동수업안’은 「4·3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조하기 보다는 해원과 화해, 상생의 가치를 가르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자료집의 내용을 보면 4·3 사건의 본질을 가린 채 「제주도민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시도를 이승만 정권이 반공국가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초토화 작전을 벌여 집단학살을 했다」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다.

실제 전교조의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은 2005년 5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단체로 데려가고, 인천지부 부지부장 출신은 2005년 1월 북한의 대남 선전을 복창해 “10년 안에 연방 통일조국 건설”,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재수없는 나라” 등의 표현을 담은 자작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2007년 1월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교사가 중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친북의식화 지침서」의 내용은 “북한이 남침할지도 모른다는 논리는 50여 년간 미국과 국내 수구반공세력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온 결과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은 미국이 핵 선제공격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자위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려는 정당한 권리다” 등으로 이루어져 학생 및 일반인들에 대한 세뇌교육 측면에서 더욱 심각성을 띠고 있다.⁵⁷⁾

(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는 출범 과정부터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적행위를 자행함으로써 1991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고,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995년 2월 25일 범민련 남측본부 출범 당시 초대 의장을 맡은 강희남 목사는 2005년 맥아더동상 파괴운동을 벌인 인사로 널리 알려졌다. 인천 자유공원에 건립돼 있는 「맥아더동상」파괴운동은 2005년 5월 10일 소위 재야인사들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다. 강희남 등 좌파 시민단체를 이끌던 간부 30여 명은 맥아더동상을 「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라며 「7월 17일에 동상을 끌어 내리겠다」고 선언하였고, 곧 「양키추방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자유공원 등 인천 각지를 돌며 천막농성을 벌여 나갔다. 강희남은 맥아더동상 철거의 이유에 대해 “6.25 당시 맥아더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양키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반미투쟁을 주도해왔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친북적 활동에 전념해왔다. 사법부로부터 이적 단체 판정을 받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단체보다 더 급진적으로 북한의 선군정치에

57) <조선일보>, 2007년 1월 22일자

대해 김일성-김정일체제를 옹호하며 찬양한다. 범민련은 2006년 2월 경기도 여주에서 「통일일꾼수련회」를 갖고 북한의 3대 애국운동 실천을 다짐하면서 ‘선군정치’에 호응하여 주한 미군 철수투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북한의 선군노선으로 ‘민족의 전도가 양양하게 뒤바뀌었다’고 주장해 온 범민련 남측본부는 2005년 4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기는커녕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가 민족의 재앙을 막는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옹호해왔다.

「전쟁에 미친 미국 부시의 핵방망이가 우리 민족의 뒤통수를 내리치려는 오늘 이북의 핵보유는 민족재앙을 막는 핵억지력으로 된다... 한마디로 북핵은 민족의 힘이고 민족공조로 미국의 핵전쟁을 막고 민족자주를 실현하자는 요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⁵⁸⁾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 현 의장은 2004년 9월 8일 소위 「미군철수해외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미군들의 무차별적 파괴행위로 남북 어디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으며 우리는 그동안 양키들의 짐승적 만행을 용납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범민련은 단체의 출범 자체가 곧 북한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질서를 부정하며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6)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2001년 3월 15일 이른바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고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통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통일연대는 한상렬 상임대표자회의의장 아래 전국연합, 한총련, 민노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등 참여하고 있는 47개 단체 대표들이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통일연대 상임대표인 한상렬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겸임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 한상렬 상임의장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짓고 “미제를 물리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원한다면 반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연합·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결의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반미정서를 고양시키거나 김정일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친북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통일연대의 각종 사업방향이나 자료집을 보면 통일연대가 반미노선을 추구

58) 범민련 남측본부, 북한의 핵개발 관련 성명서(2005. 4. 28)

하는 데 있어 북한의 대미투쟁노선을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정세 또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전쟁이나 평화냐,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친미 반통일세력의 몰락이나 득세냐를 놓고 민족자주역량과 내외 반통일세력 간의 치열한 격돌이 전개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겨루는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은 군사적 대결과 정치사상적 대결, 외교적 대결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격돌이다…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구도로 전변시켜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에서 일대전진을 이루어야 한다…대중적 반미자주화·반전평화 투쟁을 가속화하여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한반도 전쟁책동에 결정적 파열구를 낸다」⁵⁹⁾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하여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기도 막아내자! 미국반대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의지를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로 모아내자! 미국반대 전쟁반대 민족대단결!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통일대축전을 맞이하자! … 한반도에서 평화를 수립하는 근본방도는 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에 자주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근본적인 평화란 상상할 수 없다.」⁶⁰⁾

특히 통일연대는 반미단체들의 맥아더동상 파괴운동이 한창이던 2005년 9월, 맥아더 장군을 가리켜 「분단과 학살의 원흉, 전쟁 미치광이」라고 주장하며 일련의 주한미군 철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을 ‘만악의 근원’이자 ‘분단과 전쟁의 원흉’이라고 규정짓고 그 상징인 맥아더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분단과 학살의 원흉, 전쟁 미치광이를 동상으로 숭배하는 이 눈 뒤집어지는 현실을 어찌 두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지난 60년간 미군이 이 땅에서 저지른 침략과 학살과 범죄, 그 추악한 죄상을 고발할 것입니다…동지들! 9월 11일 인천에서 맥아더 동상을 끌어내립시다. 오늘 우리가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분단의 원흉이요 전쟁과 학살의 책임자이며, 이 땅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⁶¹⁾

(7)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연합 부문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005년 11월 15일과 21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에 이어 같은 해 12월 홍콩 반WTO 집회를 주도한 단체다. 2005년 11월 15일 농민대회는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죽봉·각목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로 유혈사태

59) 통일연대, 『통일연대 사업방향』(2000)

60) 통일연대, 『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선 일꾼들을 위한 교양자료』(2002. 6. 7)

61) 통일연대, 맥아더 동상 철거 관련 성명서(2005. 9)

로 마무리됐고, 12월 원정집회 역시 같은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 대회는 경찰 218명, 농민 113명 등 총 331명의 부상자를 냈다. 전농은 표면적으로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이익단체로 비쳐지고 있으나, 전농의 일부 활동이나 과격 시위의 배경에는 미국 농산물 수입에 대한 찬반을 넘어 반미주의라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전농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반미주장은 소위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배 상태에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전농은 2005년 9월 8일 성명을 통해 「2005년은 미국이 한반도를 강점한 지 60년이 되는 해」로서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시기 수많은 양민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살하고…한반도를 유린하고 민중을 학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미국 식민지라는 선동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사업목표로 잡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 전농의 시위와 각종 활동에는 농민이익단체에 걸맞지 않는 세계관과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구호와 선동이 난무해 왔다.

특이하게도 전농은 주한미군 철수를 소위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전술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전농은 2006년 2월 18일 제10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에서 북한 조선로동당의 대남구호인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에 호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식의 주장을 펴왔다. 또한 2005년 5월 18일 성명에서 「5월 정신 계승하여 주한미군 몰아내고 통일농업 실현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같은 해 8월 17일 성명에서 「남북농민은 8·15 민족대축전을 통해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데 나서자는 뜻을 모았다」고 주장해 왔다. 결과적으로 전농은 농민 이익단체를 표방하면서도 각종 반미투쟁의 선두에 서 왔고 극렬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며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반FTA단체의 친북적 인식과 태도

반FTA운동세력으로 가장한 반미세력과 북한의 반외세주의가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대표적인 선전구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민족끼리》 사상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렸던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좌우명이다.’이라는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우리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 보수세력이 집요하게 우리민족끼리 하는 앞길을 가로 막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와 친미공조는 결코 략립될 수 없으며 우리민족끼리 가는 앞길에 도전해 나서는 미제와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에게 단결의 힘으로 맞서자”고 하고 있다.⁶²⁾

반FTA세력의 반미운동은 결코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범국본 및 범국본 소속단체들이 극렬하게 펼치고 있는 반미주의에는 김일성-김정일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만이 보일 뿐이다. 범국본 반미운동은 목적의식적으로 정치이념적 투쟁양상을 지니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사회안정을 훼손하고 북한의 개인주의적 공산체제의 존속을 의도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반미주의가 지금처럼 확산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반미 좀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반미주의를 직간접적으로 고무시켜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범국본 등 반미단체들이 보인 법과 질서를 무시한 불법적 시위도 노무현 정부의 목인이 반영된 것이다. 반미운동은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질서 체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하면,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과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미국 등 서구사회에 대한 거부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상징하는 미국에 대한 반대운동은 ‘북한적 전체주의적 가치관’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이 반문명적이고 폐쇄적 개인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자주’, ‘민족’ 등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는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적 논리가 되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⁶³⁾

더욱이 반미세력들이 지향하는 친북이란 2,300만 북한주민을 위한 친북이 아니라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세력을 위한 것이다. 이미 정상적 국가임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자국민을 상대로 공개처형과 협박 등 공포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해 반FTA 세력들은 단 한 차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에 대해 북한 김정일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북한인권 상황은 전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란 감추거나 유엔의 조사와 강력한 대처방식에 반대하거나 기권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지구상 최악에 이른 북한의 인권에도 한국의 범국본 단체들은 오히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UN 등 국제사회에 대해 각종 비난을 퍼부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2006년 9월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 반미운동세력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사례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범국본은 반FTA를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전체주의체제인 김일성-김정일체제를 옹호, 미화시키고 있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할 2,300만 우리 민족의 인권 유린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⁶⁴⁾

62) <로동신문>, 2007년 6월 11일자.

63) 김광동, 앞의 책 p.61.

64) 2005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에 현재 i) 5세 미만 아이들의 77.9%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ii) 5세 이하 유아사망률이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iii) 열한 살 아이들의 키가 네 살짜리 남한

다른 한편으로 범국본 소속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FTA반대단체의 본산인 범국본은 한미동맹의 철폐를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주국방론,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 한 예로 이들이 명분으로 내거는 자주국방론은 주한미군을 배제한 채 한국군으로서만 국가방위를 전담케 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주한미군이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도발을 억제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반미주의적 범국본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체제의 붕괴와 주한 미군철수만을 주장할 뿐이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안보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이들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비용이 절감되어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측면도 외면하고 있다. 실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경제모형(KODEM-Ⅱ)으로 모의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 미군이 완전 철군했을 경우 한국은 국방비를 현재보다 매년 약 100억 달러씩 증액해야 했고 그와 같은 국방비의 증가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하여 경제규모를 2% 정도 위축시켰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게다가 주한미군 철수 시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⁶⁵⁾

물론 FTA를 정책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운동은 정책입장의 차이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반미운동 역시 개인과 단체의 사상이나 입장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FTA운동과 반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은 북한 공산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반외세주의’로서의 반미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 키에도 못 미치고 iv) 육아 여성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v) 탈북민의 80%가 여성이고, 이 중 80% 가까이 중국에서 2000~8000위엔, 우리 돈으로 돼지 한 마리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실정이 공개되었다.

65) 심양섭, 앞의 책 p.57

V. 반FTA운동과 반미운동의 비교

1. 한-미FTA와 다른 FTA 반대운동의 차이

2007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국가 중 미국, 칠레, 싱가포르 등 3개 국가와 공식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8개 국가들과 FTA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국본의 FTA 반대세력들의 활동은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FTA 반대세력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를 뛰어넘어 30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칠레 FTA·한-EU FTA 반대단체들은 주로 이해관계단체가 주축이 되어 분야별로 이해관계를 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표-5> <표-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범국본은 한국정부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2000년대 이후 추진했던 FTA에 대해서는 한-미FTA 만큼 극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

<표 5> 한국의 FTA 추진 현황⁶⁶⁾

FTA 대상국	시 기	내 용
칠 레	2004년 4월 발효	96% 품목, 10년 이내 관세철폐
싱 가 포 르	2006년 3월 발효	91.6%품목, 최대 10년 이내 관세철폐
E F T A	2005년 12월 서명	협정 서명
A S E A N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
캐 나 다	2005년 12월	3차 협상회의 개최
멕 시 코	2006년 4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2차 협상 개최
일 본	2004년 12월	6차례 협상회의 개최
인 도	2006년 3월	1차 협상회의 개최
MERCOSUR	2005년 8월	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회의
중 국	2006년	2차 민간공동연구 진행 중
미 국	2006년	협상 개시

한-미FTA 반대운동세력들은 미국외의 타 국가와의 FTA체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직

66) 김원호, 『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선진화국민회의, 2006), p.335

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참여활동 및 시위폭력성 면에서도 극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에 FTA라는 논의가 확대된 것은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거론된 1990년대 말엽이었는데 당시 한-칠레FTA를 반대한다는 세력들의 조직적 활동은 일부 농민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에 대해서도 FTA 관련 이해단체들만 반대 입장을 표명할 뿐, 아직까지 한-미FTA 반대세력들은 이렇다 할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의 FTA협상에 대한 주요 내용과 반대세력들의 주장과 활동을 나타낸 <표-6>을 보면 알 수 있듯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FTA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어서 미국과의 FTA협상과는 성격과 차원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6> FTA추진에 대한 반FTA 단체의 활동과 입장

	한-미FTA	기타 FTA	
		한-칠레 FTA	한-EU FTA
협상기간	2006.6.5~2007.4.2 (2008년 상반기 발효예상)	1999.12월 ~ 2002.10월 (2004.4.1일 발효)	2007.5.7~ (2008년 상반기 타결예상)
FTA 주요 내용	-상품 100% 관세철폐 (94% 품목 3년내 철폐) -쌀 제외한 농산물 개방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해당 품목의 관세를 10년내에 철폐하기로 합의 -농산물·공산품 등의 시장개방 내용을 담은 상품양허안 포함	-향후 10년내 95% 관세철폐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비교역적 기능 인정 (가공농산물 개방 확대)
반FTA세력 주요 주장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 한국경제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모든 것을 점령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있다. -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양 날개	-“FTA협정을 체결하면 농업부분 피해는 뻥하고 실익이 없다. 이는 농업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농업을 팔아 나라의 부를 이루는 것은 천박하고 가벼운 자본의 논리다.”	-“한-EU FTA로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 붕괴가 불가피하다” -“우리 양돈농가들이 10년 혹은 15년 내 국제경쟁력을 갖출 만한 대책도 확신도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반FTA세력 참여현황 및 활동기간	-2006.3.28 범국민 출범이후 공개적 활동 개시 -활동 초기 270 여개 단체에서 2007년 11월 현재 300 여개로 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들이 주축이 됨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 참가하고 있음.
반FTA세력 시위 폭력성	-2006.2월~2007.2월 약 340회의 집회시위 개최, 이 기간동안 26만명 참가 -2006.11.22일 시위대 7만4000명 13개 시도 중 7곳의 시청과 도청 습격	-집회시위에 1만 1,000여명 참가	-FTA 저지 원정투쟁단 30여명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 본부 앞에서 시위

물론 다른 FTA와 달리 한-미FTA가 더 큰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의 FTA반대는 다른 FTA반대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FTA 문제가 아닌 미국 자체를 부정하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FTA와 달리 범국본의 활동을 살펴보면 오직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만 극단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반미운동 움직임은 그 활동반경이 반FTA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전 반대, 한국군의 자이툰 부대 파병 반대, 주한미군의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등 미국과 관련된 전반적 영역에 확산되어 있다. 그렇기에 범국본의 한-미FTA 반대는 결코 FTA라는 정책에 대한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실제 범국본에게 반FTA는 명분이자 선전 구호일 뿐 실제 범국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은 반미운동을 선전, 선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미FTA 추진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의 한 몸에서 나온 양 날개이며,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한국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이라고 선전한다. 나아가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이란 ‘한반도를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아시아 지배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FTA 반대세력의 반FTA 투쟁은 여타 반FTA 투쟁과는 그 양상, 활동 범위면에서 차원을 달리하며, 무엇보다 반미주의라는 목적의식적 정치이념 투쟁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반미적 분위기를 확산, 선동해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범국본과 북한의 반미노선 비교

범국본 등 반FTA단체들이 FTA반대를 내세우며 주장하는 반미노선과 북한 전체주의체제가 주장하는 반미노선은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반미전략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FTA반대를 주장해왔는데 한국의 반FTA운동세력들의 반미주장의 내용도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FTA를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나 귀결점도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대미정책에 있어 지난 반세기를 통해 한결같이 적대적인 인식과 정책을 전개해왔다. 북한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 침략전쟁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로 보고 그 기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투쟁과 평화협정 공세를 펴고 있다.⁶⁷⁾ 북한의 통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규약 내용

67) 김광동, 앞의 책 p.24

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여 한결같이 미국을 제국주의사관에 입각하여 바라보고 있다.⁶⁸⁾

북한은 ‘미국은 조선 민족에게 만악의 근원이자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강한 반미주의적 가치관을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제36항 「미제의 각을 뜨자」라는 제목 하에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주석님께서서는 미제 승냥이 놈들을 때려 없애기 위하여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 놈의 각을 뜯을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시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반미적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⁶⁹⁾ 김일성은 1961년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 애국적 역량망을 위한 반미·구국 통일전선 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남북조선인민의 모든 역량을 단합하여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대한 반대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하여야 한다. 미제와 그 주구를 고립시키며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 밑에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과 북조선의 애국적 사회주의적 역량과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며 남북한 모두가 반미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미군강점 60년은 이남 민중들이 죽지 못해 산 노예살이의 기간이었고, 분단 60년은 우리 민족이 미국의 전쟁협박에 시달리며 날 새운 암흑기였으며, 이러한 암흑기의 세월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해방을 위해 북한은 희생적인 투쟁을 하느라고 물질적인 면에서 남한에 뒤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반미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은 “굴종적인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농산물을 전면 개방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강요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한-미FTA에 총체적으로 비난하고 있다.⁷⁰⁾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자유화」책동과 그 추종 세력의 반민족, 반민중적인 노동시장유연화책동과 쌀시장개방책동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이 땅의 노농대중은 투쟁만이 살길임을 자각하고 비정규직처우개선과 식량주권사수를 위한 결사의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⁷¹⁾

「미제는 대개 나라들의 민족시장을 세계적인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고 그 속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체 등이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미국이 지배하는 미국 중심 경제질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개방과 자유화를

68) 북한 조선로동당규약, 1980.10.13 제6차 당대회 개정 내용.

69) 송대성, 『북한자유선언』(르네상스, 2007), pp.115~116

70) <로동신문>, 2006년 9월 13일자.

71) 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신년메시지』(2006. 1.1)

다그치고 있다.⁷²⁾

북한의 김정일 전체주의세력에게는 자기 체제의 존재와 목표가 곧 반미노선이다. 주한미군과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 전쟁의 근원세력이자 우리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과 방해책동 세력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미동맹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남북관계를 냉전대결의 시대로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을 식민체제로 만들게 될 한-미FTA에 대해서는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전국민이 결사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선전, 선동하고 있다.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대미관과 비슷하게 한국의 반FTA운동 세력도 한-미FTA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반FTA 운동세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적 패권추구 전략으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평택기지로의 확장 이전과 더불어 한-미FTA 자체를 경제적 패권추구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국본 등 반FTA세력은 ‘미국과의 FTA체결은 미제국으로의 실질적으로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적든 당사국의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주권을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이들은 한-미FTA를 “종속적 동맹체제의 완성이 가져올 주권 상실은 주권의 상실로 끝나지 않는다. 소수에게는 ‘정상을 향한 도전’을 유발하고, 다수 대중에게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강제함으로써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이에 융합되어 있는 한국의 독점자본에겐 많은 이익을 안겨주겠지만, 이 땅의 노동자 민중과 다수 국민에게는 IMF 위기 때의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을 안겨줄 것이다”⁷³⁾라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대미인식에 따라 이들은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차이가 없다.

반FTA 운동세력의 반미노선과 북한의 반미노선의 공통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이들은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 평화 및 자주국가를 수립하는 데 있어 절대적 방해세력으로 간주하여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자주, 민주, 통일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로 삼고 있다. 둘째, 현재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질서에 대해 반FTA 운동세력은 세계 패권을 위한 미국의 강도 높은 침략수단의 연장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셋째, 반FTA 세력은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국우세력들의 결정에 불과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다.

72)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연구원, 『경제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1호)

7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06), p.26.

<표 7> 반FTA 운동세력과 북한의 반미노선 비교

	반FTA 운동세력	북한
대미인식	-일방적 패권주의 추구 국가 -한반도 분단원흉이자 평화와 통일방해 세력이자 식민지적 지배 국가	-조선 민족에게 만악의 근원이자 불구대천지의 원수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인민의 흉악한 원수
분야별 반미노선	반미=애국, 자주, 평화	반미=애국, 민족생존
1. 주한미군 및 한반도 통일	-한반도 평화 및 자주국가를 수립하는데 있어 절대적 방해세력 -자주통일원년의 해는 주한미군 철군의 해 -주한미군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로서 투쟁 전개	-우리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간섭과 방해책동 세력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세력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
2.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체제	-세계적으로도 민족내적으로도 미국의 강도 높은 침략정책과의 투쟁 선전, 선동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을 선동하여 반미대결 촉구
3. 한미동맹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국우세력의 결정에 불과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수단 -한반도 평화통일의 장애물로서 한미동맹폐지 촉구	-친미국우보수세력의 대연합을 획책하면서 식민지통치를 지탱하고 군부독재시대를 부활시키며 남북관계를 냉전대결시대 돌려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동맹폐지 촉구
4. 한-미FTA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수단 -한국사회를 완전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 본격화 수단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쟁의 상시화’ 수단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자유화 책동으로 날이 갈수록 국민생존권을 위협 -투쟁만이 살길임을 자각하고 결사투쟁을 전개

특히 이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 그리고 이들과 융합되어 있는 내국 독점자본이 노동자·민중과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전면공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한-미FTA 체결은 한국사회와 정치를 한층 더 이들 자본의 볼모로 만들고 경제적 양극화, 사회의 해체와 황폐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빈사의 상태로 내몰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자본의 착취와 수탈 및 ‘미 제국’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융합된 독점자본이 이 나라

의 노동자·민중을 한층 더 착취·수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제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반FTA단체의 주장이나 북한의 주장이나 차이가 없다.⁷⁴⁾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FTA 운동세력과 북한의 대미인식에 따른 반미노선은 크게 i) 주한 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통일 방해세력, ii)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체제 반대, iii) 한미동맹 폐지, 그리고 iv)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반대라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이와 같은 공통된 대미인식 노선은 <표-7>과 같이 나타난다.

74)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앞의 책, p.30

VI. 맺는말

지난 100여년의 세계 역사에서 잘 나타났듯 전체주의국가들은 하나같이 미국을 주적국가로 삼았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나치즘이 그랬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체제가 그랬다. 그 이후에도 리비아의 가다피체제나 이라크의 후세인체제, 쿠바의 카스트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 재산권 보장을 가장 소중한 기본 인권으로 보는 체제에 맞서는 전체주의나 독재체제는 미국을 적으로 삼았고 미국과의 투쟁을 선동하며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런 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실패국가(failed state)로 평가받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전체주의체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미국을 거부하기 보다는 미국으로 대변되거나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은 민주주의나 사상, 학문, 언론, 종교 및 거주이전의 자유수준에 있어서나 기본인권의 유린에 있어서나 세계 최악이다. 비아프리카지역으로서는 유일한 문명의 함몰지역이다. 21세기에도 존재하는 유일한 스탈린 체제이자 수령독재적 폐쇄국가로서 국가적 차원의 사교(邪敎)집단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펼쳐지는 한-미FTA 반대운동은 정상국가를 비난하고 그 국가와 투쟁할 것을 선동하며 내용적으로는 정상국가가 아닌 전체주의체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비정상체제를 부정하고 극복하기는커녕 비정상적 실패체제를 두둔하고 그 체제가 지향하는 정책을 따라갈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 있다.

특히 범국본으로 대변되는 반FTA운동단체들은 반미운동을 자신의 존재목표로 해온 단체다. 그들은 미국을 제국주의국가이자 한반도 지배세력이고 평화저해세력으로 규정짓고 한국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혁명전략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범국본 소속단체들은 한-미FTA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10, 20년 전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했고, 미군의 기지 이전을 반대하였으며, 미군 범죄 및 미군의 환경문제를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거론하며 미국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는데 몰두해온 단체들이다. 심지어 맥아더동상 끌어내리기에도 앞장서거나 이를 옹호해왔다.

더구나 범국본 소속 단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전체주의체제이자 공산주의세력인 김정일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한다는 사실이다. 전체주의국가 북한내 심각한 최악의 인권유린적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과 투쟁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평화를 구호로 내걸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하고 북한체제의 대남위협에는 눈감고 있다. 따라서 범국본으로 상징되는 반FTA세력의 한-미FTA반대라고 하는 것은 반미운동일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범국본 소속 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미국과의 투쟁을 단체의 존재목적으로 해왔다. 그렇기에 그들은 반미투쟁의 일환으로 한-미FTA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과 달리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만 적대적 행위와 불법적 폭력행위를 무차별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그 논리는 한반도 분단을 가져온 미국, 한국 민주주의와 민중을 억압해온 미국 혹은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는 미국이란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철저하게 '제국주의적 미국'이란 인식론에 입각하여 미국이 지난 6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 기여해온 점까지도 철저히 부정해가며 미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논리와 투쟁방식이란 전체주의국가이자 수령독재체제인 북한의 대미인식이나 대미투쟁노선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공산전체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군중동원적 성격의 대미공세나 미국과 한국을 분리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에게 FTA는 선택사항을 넘어 자구책의 일환이다. 무역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온 한국 경제에게 FTA는 국민복지 증진과 산업경쟁력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의 대한국 무역량은 전체무역량의 2.7%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이 12.1%에 달하는 것에서 보듯 관세없는 자유무역의 혜택은 한국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계의 시장통합은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느 수준으로 통합되어 가느냐만 남은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WTO체제를 만들고 FTA체제를 서두르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세계적 무역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이제 스스로가 자유무역체제와 이에 필요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할 위치에 와있다.

그런데도 범국본은 세계 경제규모 1위의 국가이자 유일한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한국경제의 식민지화라고 규정짓고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산업화에 대항하여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던 러다이트(ruddite)운동에는 낭만성이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범국본의 반미적 반FTA운동은 결코 무지의 소산도, 낭만적 결론도 아니다. 명백한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결코 정책적 비판이나 반대가 아니며 그것은 전적으로 반미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반FTA운동일 뿐이다. 그와 같은 반미적 반FTA운동은 역사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김정일 전체주의체제의 유지전략에 대한 동조 활동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광동,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자유기업원, 2003)
- 김성옥, 『대한민국 적화보고서』(조갑제닷컴, 2006)
- 김원호, 『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선진화국민회의, 2006)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정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유기업원, 2005)
- 김진웅, 『한국인의 반미감정』(일조각, 1992)
- 마이클 워커 편저·김정호 편역,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자유기업원, 2004)
- 맨큐 편저·김경환·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교보문고, 2001)
- 민주노총, 『노동자통일대회대토론회자료집』(2007.7.3)
- _____, 『창립선언문』(1995)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6년 대의원대회 결의문』
- 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신년메시지』(2006.1.1)
- 범민련 남측본부, 북한의 핵개발 관련 성명서(2005.4.28)
-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연구원, 『경제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1호)
-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 송대성, 『북한자유선언』(르네상스, 2007)
- 신동아, 『반전수업·낙선운동·시국선언...흔들리는 ‘교육중립’』(2004년 8월호)
- 신중섭,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자유기업원, 2005)
- 심양섭,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삼성경제연구소, 2005)
- 유석춘,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전통과 현대, 2002)
- 이각범, 『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선진화국민회의, 2006)
- 이동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과 80년대 학생운동”, <자유민주연구>, 자유민주연구학회(2007)
- 이상현,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 이시욱,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2006)
- 좌승희, “고도성장과 산업사회로의 도약”, 김광동 외, 『한국현대사 이해』(경덕출판사, 2007)
- 전교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2006)
- _____,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2005)
- _____,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2005.1.30)
- _____,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2001.5)
- 전국농민회총동맹, 『그들 5%의 대한민국!』(2006.1.9)
- _____, 『악의 원천 미국 놈과 양도깨비 들어보라!』(2006.1.14)
- 정인교 편,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해남, 2006)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의 전진과 현단계 과제』(2006.7.13)

차문중,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통일연대, 『통일연대 사업방향』(2000)

_____, 『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선 일꾼들을 위한 교양자료』(2002.6.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06)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강, 2007)

한총련, 『여름일꾼수련회 자료집』(시기 미상)

_____, 『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조국통일이론)』(2006.8)

_____, 『중앙위원회 총노선 최종안』(2006.3)

_____,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2007. 2. 10)』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선진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미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
(2007.3)

LG경제연구원, 『한미FTA의 경제적 의미와 협상 포인트』(2006.6.28)

〈조선일보〉, 〈동아일보〉, 〈로동신문〉, 〈신동아〉외 주요 일간지 및 잡지

반 F T A 인 가 반 미 인 가

2008년 1월 21일 1판 1쇄 발행

2022년 4월 14일 1판 2쇄 발행



발행처	자유기업원	발행인	최승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07236)		
전화	02-3774-5000	팩스	0502-797-5058

※본 파일은 2008년 발행한 NGO시리즈 NO.18 『반FTA인가 반미인가』 책을 재편집하여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